

영광 ASF 첫 발생... 2.1만마리 살처분·전국 48시간 이동중지

강릉·안성·포천 이어 전남까지 확산... 117호 농가 집중 소독... 방역 당국 긴장감 고조

전남 영광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정부가 전국으로 긴급 방역에 나섰다. 그간 ASF 청정지역으로 분류됐던 전남에서 처음 확진 사례가 나오면서 방역 당국의 긴장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26일 전남 영광군 소재 돼지농장(2만 1000마리 사육)에서 ASF 양성이 최종 확인됐다고 27일 밝혔다. 전남 지역 첫 발생이자 올해 들어 전국 네 번째 발생 사례다.



아프리카돼지열병방역현장.

사진=전남도제공

중수본은 이날 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 주재로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회의를 열고 발생 상황과 방역 대책을 점검했다. 발생 농장은 종돈장으로, 방역 수준이 높아야 할 핵심 시설에서 확진이 나온 점에서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다.

정부는 확진 직후 조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현장에 투입해 외부인·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사육 중이던 돼지 2만 1000마리를 모두 살처분하고 있다. 발생 농장과 인접 지역을 중심으로 소독과 역학조사도 병행 중이다.

광산구, 여인숙 거리 철거 1만3120㎡ 광장 조성
이용객 급증에도 광장 협소... 국가사업 추진 건의
환승·교통혼잡 해소 기대... 총 사업비 1055억원

중수본은 최근 강원 강릉(1월16일), 경기 안성(1월23일), 경기 포천(1월24일), 전남 영광(1월26일) 등 짧은 기간 동안 전국 곳곳에서 ASF가 잇따라 발생한 점을 들어 방역 관리 수준을 대폭 끌어올렸다.

정부는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소독 의무화, 분노 운반차량 시·도 간 이동 제한,

농장 간 기자재 공동 사용 금지, 의심 증상 즉시 신고 의무화 등 11개 행정명령과 8개 방역기준을 시행하고 위반 시 고발, 과태료, 살처분 보상금 감액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특히 돼지농장 종사자의 오염 우려 물품 반입 금지, 전국 돼지농장 퇴비사·숙소

환경검사, 종사자 현황 제출 의무화 등 추가 조치도 시행했다.

박정훈 식량정책실장은 “올해 1월에만 벌써 4건의 ASF가 발생했고 전남 영광은 그간 안전지대로 여겨지던 비발생 지역”이라며 “현재 ASF 방역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살처분하는 돼지는 2만 1000마리로, 전체 사육 마릿수(1195만 6000마리)의 0.18% 이하 수준이다. 중수본은 국내 돼지고기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수급 상황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뉴시스

경찰,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8명 추가 입건... 수사 확대

용접 불량·콘크리트 타설 등 일부 과실 확인
공무원·시공사 등 30명 입건... 구조적 문제도 수사

경찰이 광주대표도서관 공사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8명을 추가 입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광주경찰청 ‘광주대표도서관 공사현장 붕괴사고’ 수사본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하청 시공업체 관계자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구립종합건설과 하청업체 등 공사 관계자, 광주시 종합건설본부 공무원 등 30명을 입건하고, 24명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구립종합건설 서울 본사와 광주 현장사무소, 하청업체 등을 대상으로 총 7차례에 걸친 압수수색을 통해 휴대전화와 관련서류 1900종, 전자정보 10만점 등 증거물을 분석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그동안 업계 전반에서 제기된 구조물 접합부 용접 불량과 콘크리트 타설 불량 등 일부 부실시공 정황도 확인했다.

다만 이번 사고의 경우 현장에서의 각종 결함과 과실이 중첩돼 붕괴로 이어졌

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원인 규명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관련 학회 등 전문기관의 합동감시 결과는 다음달 말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직접적인 붕괴사고 원인과 관련해 설계 및 변경, 시공·감리, 관리·감독 체계 등 핵심 쟁점 전반에 대해 전문기관 감정과 자료를 종합 검토한 뒤 최종 판단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경찰은 사고 원인 규명 이후 지역 건설현장에서 반복되는 부실과 안전 관리 등 근본적인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뉴시스

공사 현장에서 만연한 재하도급과 무자격자 시공, 자재 불량 등을 비롯해 설계변경과 감리, 발주처의 관리·감독, 입찰 비위 등 전반을 살핀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11일 오후 1시58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 광주대표도서관 공사 현장에서 건축물 구조물이 무너지는 붕괴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4명이 매몰됐고 모두 사망했다.

광주대표도서관은 상무지구 옛 상무소 각장 부지(1만 200㎡)에 연면적 1만 1286㎡, 지하 2층·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되는 공공도서관이다. 총 사업비는 당초 392억원(국비 157억원·시비 235억원)이었으나 자재값 상승과 공기 지연 등으로 516억원(국비 157억원·시비 359억원)으로 늘어난 상태다. /뉴시스



광주광역시교육청(왼쪽), 전남도교육청 전경.

특별시교육청 출범에 광주·전남 교육청 ‘미묘한 신경전’

전남교육청 각종 자료 요구에 광주교육청 당혹

교육통합 찬반 시각차에 따라 통합 준비 입장차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시·도교육청 통합도 통합교육감 선출로 가닥이 잡히면서 양 교육청의 분위기가 엇갈리고 있다.

교육통합에 적극적인 전남도교육청이 소극적인 광주시교육청에 각종 자료를 요구하면서 미묘한 신경전과 통합 주도권 경쟁으로 비화되고 있다.

27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정지권이 기청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시·도교육청도 통합해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교육감을 선출하기로 합의했다.

광주교육청은 최근 ‘행정통합과 관련해 외부 기관에서 인사, 예산, 운영 성과 등 자료를 요청할 경우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말라’는 취지의 공문을 분청과 각 기관에 하달했다.

광주교육청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통합이 결정되기 전부터 전남교육청 여러 부서가 각종 자료를 요구해 와 너무 앞서간다는 지적이 있다”며 “광주는 통합에 반대하는 교육계의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한 상황”이라고 토론했다.

광주·전남 국회의원 18명과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가 행정통합 추진을 주도하면서 사실상 발언권이 배제됐던 시·도교육청은 통합교육감 선출에 일부 반발하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순응하는 모습이다.

그동안 교육 발전을 명분으로 통합교육감 선출에 찬성 입장을 보였던 전남교육청은 특별법 제정과 7월 특별시교육청 출범을 앞두고 최근 광주교육청에 다양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조직 개편과 인사, 예산 배정 등을 미리 준비하기 위해 광주교육청의 다양한 현황자료가 필요하다는 명분이 다.

반면 전남교육청은 통합 특별법에 담을 조항을 만들기 위해서는 양 시·도교육청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7월 특별시교육청 출범을 위해서도 지금부터 양 교육청이 정확한 자료를 토대로 다양한 의견을 모아야 한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전남교육청은 광주교육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이날부터 광주교육청에 대한 자료 요청은 기확부서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광주교육청은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일부에서는 “전남교육청 직원들이 점령군 같다. 상당히 무례하다”는 격앙된 모습도 포착되고 있다. /염선호 기자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교육통합을 미루자는 것은 당장의 책임을 미래로 미루는 것”이라며 “특별법 제정과 통합교육청 출범을 위한 준비 과정을 놓고 광주교육청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 양 교육청 간 갈등으로 비춰지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염선호 기자

손님 가장해 금은방 2곳 털어 달아난 30대 구속

손님을 가장해 금은방 2곳에서 절도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11시부터 낮 12시 사이 광주 동구 충장로에 있는 금은방 2곳에서 목걸이와 팔찌 등 38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손님을 가장해 금은방에 들어가 팔찌 등을 착용해보겠다고 점

주를 속인 뒤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정한 직업이 없는 A씨는 생활비가 떨어지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추적이 나서 같은 날 오후 10시께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가 과거에도 같은 수법으로 지역 내 여러 금은방에서 범행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뉴시스

(주)통일화물은 정성과 책임으로 늘 변함없이 고객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책임있는 물류문화를 만들어가는데 앞장서는 (주)통일화물
나보다 고객을 먼저 배려하는 아주 특별한 만남
이제 (주)통일화물을 만나보십시오.

(주)통일화물이 힘찬 도약을 시작합니다

- 취급차량 : 1t~12t
- 중앙지 및 지방지 신문수송전문
- 정보지 · 신문 광고대행
- 광고전단지 운송 · 배포
- 일반이사 및 포장이사전문
- 기업물류 운송 전문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동 1573-1번지 3층 ☎(062) 956-8500~2 Fax(062) 956-2001